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음악극으로 재현된 오페라

‘1945’로 창작 음악극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최우정이 음악을 맡았다. 필자는 10월 11일 낮 공연을 보았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촘촘하게 짜인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대형 뮤지컬로서 손색없는 무대 장치, 무엇보다 스타급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노래 실력은 현 단계 한국 뮤지컬 수준의 정점을 보여 주는 듯했다. 음악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극의 서사와 연출의 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아직 역사적 사실로서 엄밀히 고증되지 못한 ‘편의대’(오페라 당시 계엄군 이면서 사복을 입고 시민군을 교란하거나 선동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비정규 부대)를 모티브로 삼아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서 갈등하는 박한수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이 처음부터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다. 말하자면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형사 자베르가 작품 전체의 주인공인 셈인데, 무엇보다 극의 도입부에서부터 ‘편의대가 광주 시민군의 무기 탈취를 부추겼다’고 전제하면서 무대 위 서사의 전개는 적잖이 복잡해지고 말았다. 이 복잡한 서사를 감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비폭력 시위를 중시하는 이른바 ‘촛불 이후’의 세대에 ‘총을 든 시민군’을 무작정 영웅시하는 것은 대중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오페라 음악극 연출의 딜레마로 작용하는 듯하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제시해 주었다. 이미 검증된 원작 영화 ‘박하사탕’을 바탕으로 했지만, 원작의 특징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서사 구조를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음악극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다

를 바 없는 연출상의 고민이 따랐을 것이다. 새롭게 창작된 대목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성성을 통해 폭력의 대안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인공 영호 외의 핵심 인물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예컨대 1987년 상황에서 영호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명숙, 1980년 오페라에 영호의 오발탄에 맞아 숨지는 ‘함지박’이라는 인물도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명숙은 광주의 대학생이지만 오페라 현장에서 피 흘리는 영호를 치료해 주기도 하며, 함지박은 시민군과 시위대에 주먹밥을 만들어 주던 여성이다. 실제의 성별이 중요하다고는 남성적 폭력성에 대항하는 여성성이 오페라라는 사건의 근원적 표상이며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하는 듯하다. 무관중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그것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두 공간으로 분리하여 연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연주자와 가수 그리고 합창단의 음악은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민족음악관’을 제기하며 음악가의 사회 참여에 앞장서기도 했던 거장 이진용(작곡가)의 오페라에 대한 헌사가 오히려 음악적으로 새겨진 기념비적 작품이라 할 만했다. 지난 40년간 오페라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 가운데에는 오랜 기간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향수되는 명작들이 있는 반면,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같은 음악극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연되는 작품이 사실상 없었다. 서사적 재현 양식들이 갖는 기억과 기념의 의미 그리고 음악이 발휘하는 집단 기억과 공감 형성의 힘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아쉬운 일이었다. 올해 초연된 두 편의 음악극 작품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꿈꾸는 2040

코로나 팬데믹과 성숙한 민주주의



오태하 위안연구원 운영위원·대학생

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에 우리들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것은 왜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보자. 먼저 개인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며,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답을 말하자면, 아니다. 개인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 생존의 확신을 전제로 하여 타인의 생존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하다. 생존이 없는 한 자유도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존은 확실히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집단과 정부가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애석하게도 그것 역시 아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상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와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개인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문제의 열쇠로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상당수 국가의 국민들은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에도 거리에 나와 자유를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자유를 쟁취해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고 고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이다.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쟁취한 결

과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한마디로 주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자발적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방역 지침과 통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자발적 동참을 통해 협조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인 된 국가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의 일상과 생존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방역 파시즘’이나 ‘환경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정부들의 강제력 행사가 비민주적이어서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을 향한 치열한 투쟁에 우리가 스스로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만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두고 다른 이들의 주인 된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쟁취해 냈고 자유의 주인이지만, 아직도 자유를 쟁취하고자 투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만이 우리 곁에 존재하기에 더욱 그렇다. 시대는 변화했다.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지금, 우리는 쟁취한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해야만 한다. 주인 되기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주인 된 투쟁을 계속하자.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자. 우리의 자유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데에 사용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주인일 것이다.

기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과제



최은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장

그 첫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여전한 역할 갈등과 과중한 업무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중 조사 업무 공공화에 따라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4개 지역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 지원·동행 역할을 부여받았다. 반면,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4개 지역은 조사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심층사례 관리기관으로 역할을 개편하면서 아동학대 가정의 전문성 있는 사례 관리자로서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대와 부담을 안게 됐다. 때문에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민관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현장의 관련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기까지 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 체계를 살펴보면 일반 회계는 11억 7000만 원, 범죄 피해자 보호금이 225억 8000만 원, 복권 기금은 59억 1000만 원가량이다.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는 3.9%에 불과하며, 법무부 예산인 범죄 피해자 보호금이 76%, 기획재정부의 복권 기금에서 20%를 충당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금이나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언제든 축소되고 변동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체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로 전환하여 고정적인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정은 복합적인 문제와 가족 기능이 약화된 경우가 많아 가정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나 공공 차원의 노력은 사실상 부재하다.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는 2014년부터 가족 기능 회복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표준화되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66개 지자체의 26% 수준에 불과하며, 전남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만 해도 사례 관리 상담원 한 명당 62.5명의 아동 보호를 담당하고 있어 촘촘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은 28.5%, 근무 기간은 평균 3.3년으로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디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더 많은 상담원이 현장의 자리를 지켜 낼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더 많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社說

정부 예산안 누락 ‘지역 사업비’ 확보 총력을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의, 소위원회 심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국비 확보 전담 팀을 꾸려 국회와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총력전을 펴 왔다. 그 결과 광주시는 올해보다 14% 늘어난 2조 7638억 원을, 전남도는도 6.7% 증액된 7조 1782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친환경 공기산업,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24개 사업 168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국립 심뇌혈관센터 건립 등 5000억원 규모의 70개 사업도 누락되거나 삭감됐다.

이에 따라 누락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되살리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문제는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초선인 데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소위원회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50명의 예결위에 양향자·김원익·서동용 의원 등이 포함됐지만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경우 추가 예산 확보는 커녕 정부 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지키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재민 위한 임시주택마저 부실시공이라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지은 임시주택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와는 다른 규격 미달의 자가 자재를 사용해 그렇지 않아도 집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을 두 번씩이나 울린 것이다. 구례군은 지난 8월 말 24㎡(7평) 규모의 소형 조립식 임시주택 50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긴급 지원된 임시주택의 한 채당 납품가격은 3000만 원으로, 모두 1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설치된 주택이 시방서(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규격 미달이나 자가 자재로 시공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와 뼈대 역할을 하는 철제 골조는 규격품이 아닌 일반 철판을 절단해 썼으며 가격이 비싸지만 강도가 뛰어난 아연 강판 대신 일반 파이프를 사용한 것

도 드러났다. 주택을 감산 벽체도 단열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교적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은 물론 단열 기능이 떨어져 겨울을 이재민들의 겨울 나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육안으로 보아도 값싼 재료로 손쉽게 공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청은 뭘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제작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우레탄 등 원하는 자재 수급이 되지 않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군청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구례군의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군은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등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역사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엔 무려 8천만 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중국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내전일 뿐”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 70주년을 맞아 “1950년 6월 25일 조선 내전의 발발 후 미국은 병력을 보내 무력 개입을 했고 전면전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특히 공청단은 이번엔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일

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중국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몇 년 새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확대, 한국까지 참여하는 ‘펜타’(Penta)로 개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구례군의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군은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등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관이 지난달 27일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관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인식이다. 한데 이를 뿌리부터 뒤엎는 중국의 행태는 흔히 볼 수 있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역사왜곡’을 넘어 많은 의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혹은 ‘한국의 안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

항미원조 전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미 방탄소년단(BTS)의 연설에 국

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관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경제 부 220-0663 사회 부 220-0652	문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영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 관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 사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